

# 전교조 광주 “사적영역 정치 기본권 보장을…헌법소원 검토”

### 제자에 총선 투표 권유 글 보낸 공립중 교사 백금렬씨 1심서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형의 선고유예 판결 “직무 연관 없는 사적활동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기를 검토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직 박탈 위기에 처한 광주 공립중학교 교사 백금렬(48)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계기로 헌법 소원을 검토 중이다. 백씨는 21대 총선 전날 자택에서 제자 4명에게 선거권을 갖게 된 제자 4명에게 사회관

계망서비스 메신저로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 권유 글을 보낸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8일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백씨는 자격정지형이 확정되면 백씨는 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직무와 연관 없는 사적 활동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범위를 과도하게 판단, 시민으로서 기본권조차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백씨가 졸업해서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교사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강제력이나 공적인 힘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시민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임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도 문제된다면 교사·공무원들은 선거 시기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과잉 제재에 계속 억압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한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든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재 정치에 동원됐던 교사·공무원의 기계적 중립을 오늘날 공직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에까지 강요하는 법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백씨 징계를 확정 판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23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백금렬(공립중 교사, 사진 발인 중)씨가 21대 총선 전날 제자들 4명에게 투표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18일 1심서 자격정지 1년 판결(징역 6개월 선고유예)을 받아 이러한 회견을 열었다.

백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지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공무원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심 판결 항소와 헌법 소원에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 이용객 못만난 대여스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16개 스키장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23일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내 스키대여점에서 이용객이 줄어든 탓에 장비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

## 노동자 201명 임금 등 18억5000만원 체불 업체 대표 구속

### 추석 2~3일전 해고 통보·기성금 채무 변제 사용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기성금으로 법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M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 영암에서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노동자 201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 18억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또 노동자 201명에 대해 추석 2~3일전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임

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급받은 기성금을 자신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사업주 김씨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영암 대불산업단지.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산강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법령 위반 적발

###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10건 최다…행정처분·고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3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쳐 31곳에서 총 3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는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8건 ▲안전교육 미이수 5건 ▲폐업 사업장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2건 순이었다. 환경청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31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내

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올해에는 허가업체 대상 정기 지도·점검과 함께 미세먼지·화학사고 등 사회이슈 관련 특별 점검도 이뤄졌다. 특히, 여수·하남 산단 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촘촘히 점검해 화학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 전남소방, 성탄절·연말연시 특별 경계근무 돌입

### 인력 1만4861명·장비 687대 투입

전남소방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사고 예방,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의 경우 24일부터 28일까지며, 연말연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이어진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소방관서의 소방인력 1만4861명(소방 3353명, 의용소방대 1만

1385명, 의무소방원 123명)과 장비 687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추고 24시간 대형 재난사고 방지에 나선다.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서장이 지휘선상에 근무하며, 긴급상황을 대비해 전 직원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교회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관리 방법 등을 비대면으로 지도하고, 해넘이·해맞이 명소를 대

상으로 소방차를 이용한 거점 기동순찰과 함께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도보순찰도 병행한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올해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이지만 도민들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활동과 긴급출동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